

해외환경통합정보망(EISHUB) 2020년도 환경규제대응보고서

규제대응보고서

탄소중립을 위한 EU Green Deal 주요내용



탄소중립을 위한 EU Green Deal 주요내용

(주)에이케이에이 제품전략실 기셋별 책임연구원

1. 개요

2020년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을 약속한 신기후체제 시작의 원년으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의 청사진을 담은 EU 그린딜을 발표하였다. EU 그린딜은 현재 직면한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응하고 동시에 이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장기 경제체제 전환계획이다. 향후 EU 그린딜의 구체적 목표 및 후속조치에 따라 유럽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교역 및 기후변화 관련 투자,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월에는 또한 그린딜의 후속조치로 1조 유로 규모의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과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가 발표되었다.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은 그린딜 실행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전환체계는 EU 모든 회원국이 그린딜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2027년에 걸쳐 최소 1천억 유로(약 129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그린딜 시행에 가장 취약한 국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금년 3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유럽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이 유럽의회에 제출되며 탄소중립을 향한 유럽 사회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EU의 새로운 전략인 그린딜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그린딜 정책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 대기 중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을 상쇄 가능한 정도의 양을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 참고로 파리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이내로 제한하기 위하여 각국이 2050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2020년 말까지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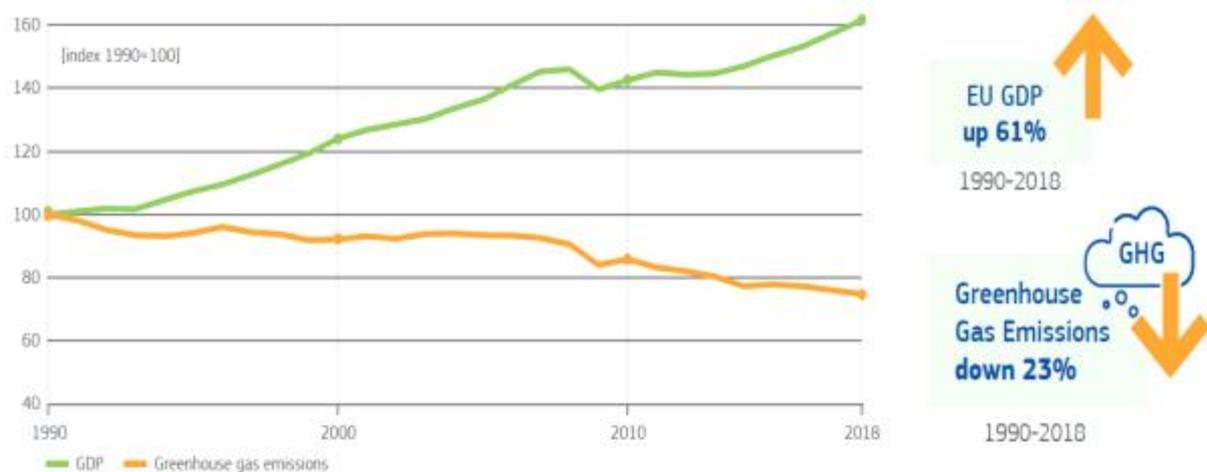
규제대응보고서

2. 본론

2.1 EU 그린딜 도입배경 및 내용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EU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정책대응이 수반되지 않으면 인류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고 평가하며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U는 이미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회원국별 목표 설정 및 추진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로의 현대화와 전환을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 1990년에서 2018년까지 EU 내 경제 성장이 61% 증가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은 23% 감축되었다.

〈그림 1〉 EU GDP 및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1990~2018)



EU 집행위는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전환 비용은 무시할 수 없지만 정책대응 부재 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 탄소중립 정책 대응 부재 시 발생가능한 문제

- 대기오염에 따라 연간 40만 명의 유아 사망
- 폭염으로 인해 연간 9만 명 사망
- 기온상승에 따라 멸종위험에 처한 생물 14% 증가
- EU 남부지역 40%가 물부족 현상 직면
- 매년 홍수위험에 50만 명 노출
- 매년 해안침식 위험에 220만 명 노출
- 전 세계 기온 3°C 상승 시 경제적 손실 1,900억 유로
- 2050년까지 식료품 가격 20% 상승
- 폭염에 따른 사망으로 연간 400억 유로 비용 발생

그러나 현재의 정책들로 2050년까지 절감할 수 있는 배출량은 60%에 불과하므로 EU 집행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EU 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지원이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2019년 12월 발표된 EU 그린딜은 2050년까지 EU 내 탄소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안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친환경 농업기술을 활용한 농식품 생산, 생물다양성의 손실 최소화 및 보존, 위해오염물질 배출 감축과 같은 저탄소·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90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던 기존 목표에서 50~55%로 상향 조정하고, 2020년 3월에는 기후법^{*}을 제정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구체화하고 EU의 모든 정책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EU의 감축 목표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 수준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면 EU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탄소누출(carbon leakage) 또는 EU 역내산업 경쟁력 약화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 제안도 고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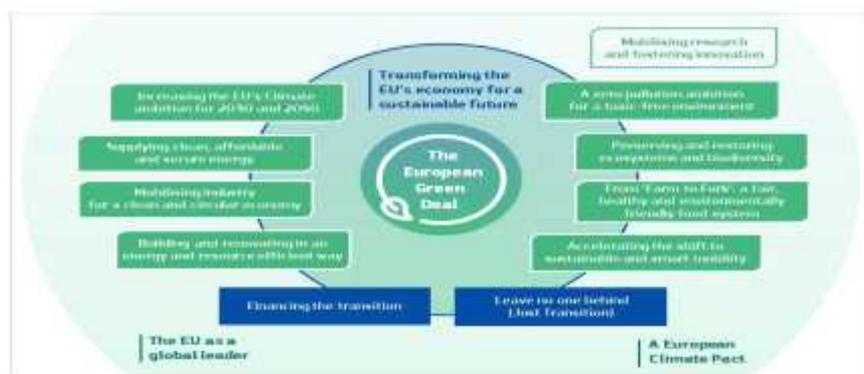
*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여 EU의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되게 만드는 목적으로 2020년 3월에 제정

** 역내 수입품에 탄소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EU 그린딜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4개 분야와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보존 2개 분야를 주요 정책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간 EU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에너지(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및 효율성 증대), 수송, 삼림, 투자기금 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EU 그린딜 또한 에너지 부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경우 에너지 생산뿐 아니라 에너지 절약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도 중요한 정책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친환경 기술을 통해 자원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목표로 함께 제시됨에 따라 산업부문과 친환경 식품에 대한 정책대응도 강조되었다.

〈그림 2〉 유럽 그린딜 요소



〈표 2〉 EU 그린딜 분야별 주요 정책

정책 분야	내용
청정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중점 추진
지속가능한 산업	순환경제 및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지원하고 장려하는 산업전략 추진
건축	에너지 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과 관련하여 건물의 에너지 성능 법안 제안
지속가능한 수송	수송 분야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2050년까지 배출량 90% 감축
농식품	친환경기술 도입과 친환경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Farm to Fork' 전략 추진
생물다양성	2021년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안

(청정에너지) 2030년과 2050년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을 탈탄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경제 분야 전반에 걸친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EU 집행위는 청정에너지 개발이 소비자 편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하였다.

재생에너지는 청정너지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EU 집행위는 2020년 중 해상풍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6월까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 시 에너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회원국들은 2023년 회원국별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계획 개선 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목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국경·지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럽에너지망(TEN-E) 규정을 포함한 에너지 관련 규정이 탄소중립 목표와 양립 가능한지 검토하며, 스마트그리드 수소네트워크 탄소포집·저장·활용과 같은 적극적인 혁신기술 및 인프라 활용이 제안되었다.

(지속가능한 산업) 자원채굴 등의 산업행위가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손실 및 물 부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함에 따라 자원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상황에 처해있다. 그러나 현재 EU의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하여, EU 집행위는 재활용률을 개선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집행위는 새로운 EU 산업정책을 제안하고 순환경제 실행계획을 제안하였는데, 산업정책의 경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저탄소 기술개발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순환경제 실행계획의 경우 섬유, 건축, 전자 및 플라스틱과 같은 에너지 집적산업을 순환경제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와 동시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 및 제품 개발을 통해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탄소배출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독려한다.

(건축) 건축부문이 EU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므로 EU 집행위는 2020년 중 건물의 에너지 성능지침에 근거하여 회원국의 중장기 전략을 평가하고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배출권거래제)에 건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2020년 중 EU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건축 및 건물 관계자, 엔지니어,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에너지 혁신 저해 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수송) EU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수송은 온실가스 감축에서 중요한 분야로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수송으로 인한 배출량의 90%를 감축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 중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수송전략 마련으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원 파악 및 개선을 예정 중이다. 육상 화물수송에서 도로부문은 75%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철도와 해상·운하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2021년까지 철도 및 운하 부문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화석에너지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를 종료하고 해운부문의 EU ETS 편입과 함께 항공부문에 무상으로 제공되던 배출권(EUA)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 자율차량 및 커넥티드 차량과 같은 다양한 수송수단 개발, 통합 수송서비스인 Mobility as a Service 개발을 지원하고 2025년까지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1,300만 대를 위한 공공 충전시설을 100만 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사용 장려를 위한 대체연료인프라 지침과 유럽교통망(TEN-T) 규정을 새로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농식품) EU 집행위는 공농농업정책 예산의 최소 40%와 해양어업기금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에 할당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회원국 별 농업전략*이 EU 그린딜과 ‘Farm to Fork(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 목표를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Farm to Fork’전략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하며, 식품 처리 및 소매부문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식품에 대한 지속가능 소비 독려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다.

* 정밀농업, 유기농법, 농업생태학, 산림생태학, 엄격한 동물복지 기준 등 지속가능한 방안이 활용되어야 하며 회원국은 화학 살충제·비료·항생제 사용 절감방안 또한 모색해야 함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EU 집행위는 2020년 3월까지 생물다양성 전략을, 2021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며 EU의 모든 정책은 유럽 내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EU 산림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산림조성, 산림보존 및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어업에서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2020년 포르투갈에서 개최되는 UN 해양총회에서 이러한 정책대응의 중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기와 같은 EU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는 EU 예산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기후 관련 활동 프로그램에 EU 예산 25%를 배정하였으며 InvestEU* 기금의 최소 30%를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외에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 금융기관과도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EIB는 2025년까지 기후 관련 투자목표를 기존 25%에서 50%로 2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 2018년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으로 InvestEU Fund, InvestEU Advisory Hub, InvestEU Portal로 구성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EU는 환경, 기후, 에너지 분야의 정책을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홍보 및 시행할 것이며 UN, G7, G20, WTO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동원하기 위하여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또한 향후 통상협정 체결 시 상대국의 파리협정 이행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 및 기후목표 달성을 촉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G20 공약에 따른 국제 화석 연료 보조금 지원 종료, 다자간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자금 조달 폐지, 지속가능한 자금 조달 강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폐지 및 메탄 배출량 감소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2.2 그린딜 투자계획 및 공정전환체계

그린딜 후속 조치의 일환인 그린딜 투자계획은 그린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 투자계획이며 그린딜 시행으로 타격을 받을 석탄 중심 또는 탄소집약적 산업 구조를 가진 회원국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EU는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295조원)를 조성할 예정으로 탄소집약적 활동이 높은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를 마련하여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럽투자은행이 동 자원 조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녹색 예산 및 조달 시스템 등 공공부문의 선행 투자를 통해 민간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전환체계의 경우 공업 중심 국가인 폴란드가 취약한 자국 경제구조를 근거로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그린딜에 참여하지 않자 유인책으로 마련한 제도로, 해당 안을 통해 광산 등 화석연료 기반 또는 탄소집약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의 재교육, 재취업, 기후친화적 창업, 건물 및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3 유럽 기후법안

유럽위원회는 이미 2050년까지의 기후중립 달성안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EU가 2020년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 제출할 장기 전략의 토대가 되어야한다. 이러한 장기 전략은 2020년 3월, 제1차 유럽 기후법으로 유럽의회에 제안되어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검토 표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EU 그린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해당 법의 목적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법적구속력을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비용효과적인 관점에서 EU의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하며, 투자자 및 기타 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기후중립으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임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 시행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에너지집약적 산업 및 자동차업계 등은 11백만개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였으며 산업중심의 동유럽 국가 또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회·경제 전체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정전환체계 등의 유인책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표 3〉 유럽 기후법안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2조,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0' 달성,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 9월까지 검토 후 수정, 필요시 2021년 6월까지 이행수단 개선
제3조, 탄소중립 달성경로	2030~2050년까지 감축경로 설정 후 이행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고 공공부문·산업계·국민에게 예측가능성 제공 (파리협정에 의한 5년 주기 전 지구적 이행점검 후 6개월 이내 감축경로 재검토 예정)
제4조, 기후변화 적응	회원국별 기후탄력성 강화를 위한 적응전략 수립 및 이행 요구
제5조, EU차원의 이행 평가	2023년 9월부터 5년 주기로 EU의 감축·적응 노력 평가
제6조, 회원국 평가	2023년 9월부터 5년 주기로 EU가 회원국의 감축·적응 노력 평가
제7조, 평가방법	유럽환경청 보고서, EU 통계, IPCC보고서 등 활용

2.4 EU 그린딜 관련 이슈

EU 그린딜의 궁극적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의 주요 인자는 에너지와 수송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국제 사회는 파리협정에 따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조치와 국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감축을 요구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그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되었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는 많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carbon tax)**와 같은 유형의 탄소가격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여 배출주체가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상쇄 메커니즘(offset mechanism), 결과기반 기후재원(result-based climate finance) 등의 유형이 있음

** 에너지원별 탄소함유량에 따라 별도로 과세하는 제도

에너지의 경우, EU의 재생에너지 활용 및 투자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관련 정책 추진에서 해상풍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EU는 전력 생산의 33.4%를 재생에너지원으로 조달하였으며 해상풍력은 유럽 국가들이 선두에서 활약 중인 분야이다. EU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65~85GW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EU 그린딜에서도 해상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략 수립이 언급된만큼 해당 에너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송분야의 경우,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송(특히 도로수송)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수송 분야 기술 혁신, 지속가능연료 활용,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수송인프라 개선, 소비자정책, 배출규제와 같은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엔진시스템 등 수송분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가능수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송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전기, 수소 및 바이오 연료 등 저탄소 연료로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전기차는 아직 글로벌 수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 수준이나 각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이행에 따라 보급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분야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3. 시사점

EU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표방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EU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그린딜 정책별 추진 계획에 따라 EU 집행위는 구체적 정책안 및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국가 차원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련 정책 분야간 논의를 통해 사전 정보를 획득 및 공유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EU의 탄소국경세 논의 전개에 대비하며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자동차, 컴퓨터 등 전기전자장비와 같은 제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므로 탄소국경세 도입 시 주요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관련하여 EU의 사례가 주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으므로 EU 그린딜 관련 규제와 지원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지역별 현지진출과 협력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그린딜에서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을 강조한 만큼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시장이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지분투자, 에너지 공기업·금융기관과의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사업추진 노하우를 습득하고 부족한 사업실적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지원정책 뿐 아니라 각국의 기술표준과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적인 협력전략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참고문헌

-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EUROPEAN COUNCIL, THE COUNCIL,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17
 -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EU) 2018/1999(European Climate Law)
 - The EU's track record on climate action_The European Green Deal
 - 유럽 그린딜 관련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03
 - 기후변화 국제동향 뉴스레터 vol.64, 한국환경공단, 2020.01
 - 기후변화 국제동향 뉴스레터 vol.66, 한국환경공단, 2020.03
 - 유럽 그린딜이 알려주는 국제사회 주요 이슈와 시사점은?, HelloT ,2020.06.09
-

탄소중립을 위한 EU Green Deal 주요내용



해외환경통합정보망(EISHUB) 2020년도 환경규제대응보고서